

‘서민 주거안정, 지속가능한 주거공동체 서울특별시’

2021년 현안 업무보고

2021. 4. 26.(월)

서울특별시
(주택건축본부)

보고 순서

I. 일반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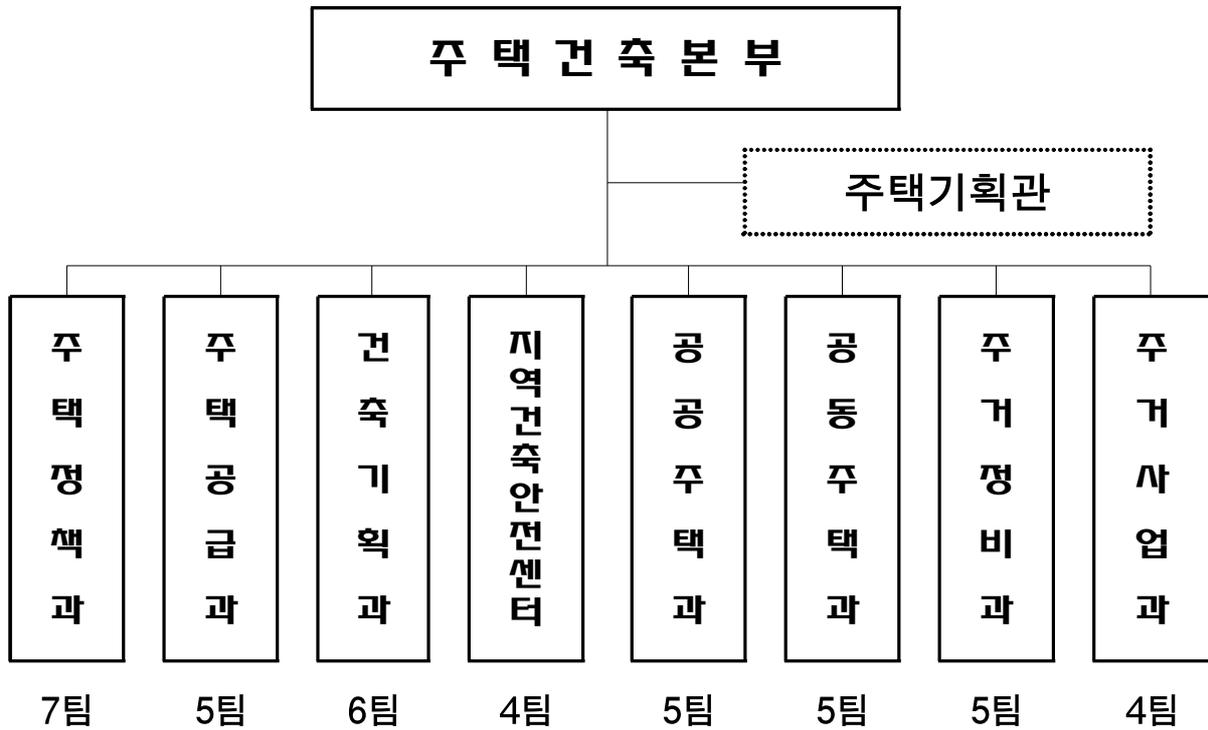
II. 정책목표와 추진전략

III. 주요 현안업무

I. 일반 현황

조직 및 인력

- 조직: 1본부 1관 7과 1센터 41팀



- 인 력: 정원 182명 / 현원 185명

(단위: 명, '21. 3월말 기준)

구 분	계	일 반 직					전 문 경력관	사 무 관리직	임기제
		2·3급	4급	5급	6급	7급 이하			
정 원	182	1	8	43	70	47	2	3	8
현 원	185	2	8	44	58	62	2	3	6
성별 (남/여)	113/72	2/-	8/-	33/11	31/27	35/27	1/1	-/3	3/3

예 산

● 세 입: 2,917,201백만원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'21년	'20년	'20 대비 증감	
			증감액	증감률(%)
계	2,917,201	3,279,944	△ 362,743	△ 11.0
일 반 회 계	341,234	319,260	21,974	6.9
주택사업특별회계	2,550,342	2,937,326	△ 386,984	△ 13.1
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	25,625	23,358	2,267	9.7

● 세 출: 3,271,917백만원(일반 864,954백만원, 특별 2,406,963백만원)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'21년	'20년	'20 대비 증감	
			증감액	증감률(%)
계	3,271,917	3,587,476	△ 315,559	△ 8.7
주 택 정 책 과	1,465,834	1,477,649	△ 11,815	△ 0.7
주 택 공 급 과	142,499	84,318	58,181	69.0
건 축 기 획 과	3,378	2,523	855	33.8
지역건축안전센터	3,128	2,120	1,008	47.5
공 공 주 택 과	935,556	1,304,078	△ 368,522	△ 28.2
공 동 주 택 과	22,418	12,435	9,983	80.2
주 거 정 비 과	319,331	324,060	△ 4,729	△ 1.4
주 거 사 업 과	379,773	380,293	△ 520	△ 0.1

II. 정책목표와 추진전략

정책목표

‘서민 주거안정, 지속가능한 주거공동체 서울특별시’

정책간제

주택공급 및
주거지원 강화로
서민주거 안정

철저한
안전관리 체계 구축
건축안전 최우선

투명하고
살기좋은
주거공동체 조성

전문성과 투명성
강화로 선진화된
정비사업 추진

추진전략

- 공공주택 공급 및 주거복지 확대로 **지속가능한 미래도시 서울** 추진
- 촘촘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으로 **건축안전** 강화, 시민참여 통한 **건축 공공가치** 실현
- 투명하고 안전한 **공동주택 관리** 강화, **협동과 공유의 아파트 공동체** 활성화
- 보존과 개발, 보호와 지원이 공존하는 정비사업으로 **전문화·선진화** 추진

Ⅲ. 주요 현안업무

1. 청년월세지원 사업 추진
.....
2.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활성화 및 입주편의 향상
.....
3. 지역발전과 함께하는 8만호 공공주택 공급
.....
4. 건축주택 종합정보시스템 구축
.....
5. 불법건축물 예방을 위한 관리 및 홍보 강화
.....
6. 위험건축물(D·E급) 안전관리 계획
.....
7.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구성·운영
.....
8. 공공재개발사업 추진현황
.....
9. 재개발·재건축 미해산 조합 일제조사 및 관리방안 마련
.....
10. 정비(예정)구역 해제지역 실태조사 및 분석 추진
.....

1 청년월세지원 사업 추진

〈 주택정책과〉

청년층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하고, 사회 진입 등 삶의 선택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월세 지원

□ 사업개요

- 지원대상: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20%(220만원) 이하 청년(만19세~39세 이하) 1인 가구
※ 신청제외 : 주택소유, 일반재산 1억원 초과자, 자동차 2,500만원 이상 소유자 등
- 지원규모: 5천명
- 지원내용: 월 20만원 임차료 지원(최대 10개월) ※ 생애 1회 지원
- 선정기준: 월세 및 임차보증금 기준, 3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
- (1구간) 보증금 5백만원 이하, 월세 40만원 이하 (2구간) 보증금 2천만원 이하, 월세 50만원 이하 (3구간) 보증금 5천만원 이하, 월세 60만원 이하
- 소요예산('21년): 10,490백만원(지원금 10,000, 민간위탁금 430, 홍보비 등 60)

□ 추진현황

- 청년월세 지원신청 '서울주거포털' 온라인 신청접수(3.3~3.12)
- 36,330명 지원신청, 평균 경쟁률 7.2:1
- 신청기간 내 전화 10,462건(1일 평균 1,307건), 온라인 1,069건 상담실시
- 신청서류, 소득재산 및 유사사업 중복수혜 등 심사(3.15~4.12)
- 26,707명 심사통과(1구간 6,978명, 2구간 12,027명, 3구간 7,702명)

구분	계	1구간	2구간	3구간
선정인원	5,000명	2,500명	2,000명	500명
신청인원(경쟁률)	36,330명(7.2:1)	8,756명(3.5:1)	16,001명(8:1)	11,573명(23:1)
심사통과	26,707명	6,978명	12,027명	7,702명

□ 향후 일정

- 이의신청 접수·심의 후 전산추첨 최종 선정(4.23) 지급 : '21.5월~

2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활성화 및 입주편의 향상

〈주택공급과〉

역세권 청년주택 입주 및 관리지원을 강화하여 임대료 부담은 낮추고, 주거 환경 향상을 통한 2030 청년·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도모

□ 추진현황

- (공급) '21년 3월까지 공급목표(5만7천실) 대비 **89%(5만1천실)** 추진 중

구분	계(144건)	인허가 완료(75건)	인허가 진행 중(69건)	사업제안서 신청(38건)
공급(인허가) 현황	50,819실	23,466실	27,353실	19,964실

- (입주) **13개소(5,532실) 입주 및 '21년 8개소(1,638실) 추가 입주예정**

- '20년 입주 완료: 충정로3가(499실), 용답동(170실) 등 7개소(총 2,669실)
- '21년 입주 개시: 창전동(681실), 한강로2가(1,226실) 등 6개소(총 2,863실)
- '21년 입주 예정: 천호동(225실), 공릉동(270실) 등 8개소(총 1,638실)

- (관리) '민간 주택공급자 공급'에서 '**청년 주거편의성 확대**' 로 정책 확대

- 청년주택 입주생활지원단 시범운영(염창동 청년주택, '20.12월~)
 - ▶ (입주 전) 주거·편의시설, 커뮤니티 시설 점검 (입주 후)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 지원 등
- 입주완료 13개소 대상 총 2,518명 816억원(약 3,240만원/실) 주거비 지원

민간 공급자(시행자) 중심	입주자(청년) 중심	
공급물량 8만실 중점	주거 편의성 중점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역세권 범위 확대 ■ 용도지역 상향 ■ 용적률 등 규제 완화 ■ 촉진지구 지정면적 요건 완화 	+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거주비용 추가 완화 ■ 주거선택 자율권 강화 ■ 생활편의 확대 ■ 주거 안정성 확보

□ 향후계획

- 청년주택 종합지원센터 본격 운영 및 입주생활지원단 운영 확대: '21. 4.
- 역세권 청년주택 정책 개선방안 마련 : '21. 4.
 - 인구·주택·주택시장 변화 등 고려, 추진방향 및 공공성 지속가능성 확보방안 모색

3 지역발전과 함께하는 8만호 공공주택 공급

〈 공공주택과 〉

도시재창조의 관점에서 주민 삶의 질과 미래도시 전략을 함께 고려한 다양한 공공주택을 공급하여 지속가능한 주거 환경 조성

□ 사업개요

- 주택공급 혁신방안을 바탕으로 4년간('19년~'22년) 8만호 공공주택 추가 공급

구 분	공급 목표	주요 내용
합 계	8만호	
기 존 부 지 활 용	2.4만호	저이용 공공부지 복합화 등
도 심 형 주 택 공 급	3.4만호	도심 용적률 및 주거비율 완화, 공실 전환
저 층 주 거 지 활 성 화	1.4만호	빈집활용, 소규모 정비사업, 신축계획주택 매입
정 비 사 업 등 활 용	0.4만호	임대단지 재건축, 재개발·재건축 제도개선

- 소요예산('21년) : 3,956억원(국비 2,325억원, 시비 1,631억원)

〈서울시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('18.12.26)〉

- ① 주민편의시설 및 미래혁신 시설(청년창업시설, 공원 등) 함께 공공주택 공급
- ② 창조적 방식의 공간 활용을 통한 도시(공간) 재창조
- ③ 도심형 주택확대로 직주근접 실현(역세권 용도지역 상향, 도심공실 주거 전환 등)
- ④ 직장인, 신혼, 중산층도 함께 사는 공공주택
- ⑤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디자인 혁신 및 다양화

□ 추진경과

- 누적('19~20년) 공급목표(15,610호) 대비 86% 달성(13,385호 공급)
 - '19년 공급목표(4,040호) 대비 112% 공급(4,509호 공급)
 - '20년 공급목표(11,570호) 대비 77% 공급(8,876호 공급)
- 본격 시행을 위한 제도정비(도시계획조례 개정 등), 사전행정절차(지구지정 3, 공유재산관리계획 7 등) 실시 및 8만호 T/F 총 41회 운영

□ 추진현황('21.3월말 기준)

○ '21년 공급목표 : 총 24,761호

- 기존 부지활용 8,760호
- 도심형 주택공급 11,678호
- 저층주거지 활성화 3,673호
- 정비사업 활용 650호

○ 세부 추진내용

① 기존 부지 활용 (목표 8,760호)

- (북부간선도로) 보상계획 공고('20.8), 기본설계 중 → 사업승인 추진
- (연희, 증산) 사업승인('20.3) 후 착공(연희 '20.7, 증산 '21.8 예정)
- (장지/강일차고지) 기본설계 후 사업승인 추진('21.9 예정)

② 도심형 주택공급 (목표 11,678호) - 상업준주거 5,308, 역세권활성화 6,370

- (상업·준주거지역 용적률 완화) 12호 공급, 20개소 3,715호 절차 진행 중
- (역세권 활성화 사업) 15개소 5,272호 단계별 절차 추진
- (도심 공실전환) 153호 공급, 자치구 지속 홍보로 사업발굴 추진

③ 저층주거지 활성화 (목표 3,673호) - 빈집 490, 소규모정비 783, 신축주택 매입 2,400

- (신축주택 매입) 1,111호 공급, 1차 매입심의(4.7) 결과 1,784호 매입 결정
- (빈집 활용) 85호 공급, 132호 설계 추진(건설형 58호, 사회주택 74호)
- (소규모 정비사업) 195호 공급, 186호 단계별 절차 추진

④ 정비사업 활용 (목표 650호)

- (정비사업) 6개소 143호 정비계획변경 후 인허가 추진(재건축)
- (임대단지 활용) 시범사업지(하계5단지, 910호) 선정 및 기본구상용역 추진

□ 향후계획

-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행정절차 이행
- 사업지별 체계적 공정관리로 목표달성 추진

4 건축주택 종합정보시스템 구축

〈 주택정책과 〉

'21년부터 '25년까지 단계별 「서울 건축주택 종합정보시스템」을 구축하여 건축·주택 데이터 품질 개선 및 정책지원 서비스 강화

□ 추진방향

- 자료 누락, 핵심정보 부재 등 현행 건축주택정보서비스 문제점을 개선하여 **분산된 데이터 연계·통합시스템 구축**을 통한 정책수립 지원기능 강화

현 행(문제점)	개 선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■ 핵심정보 부재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주택재고, 에너지, 안전정보, 노후주택 정보- 종부세 대상자, 다주택소유자 정보■ 기능 및 서비스 미흡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건축물 안전점검 이력 확인 불가- 공간정보 기반 건축 및 주택정보 부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■ 신규 데이터 확보를 위한 추가정보 연계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건축물 구조, 안전 및 에너지 정보 통합관리■ 공간정보와 건축주택 데이터 융합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GIS 기반 관리 및 지역별 분석 서비스 제공■ 건축물 생애주기 기반의 통합정보 관리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허가·착공·준공·멸실 등 모든 단계 이력정보 관리

□ 사업개요

- 사업명: 서울 건축주택 종합정보시스템 1단계 구축
- 사업기간: 계약일로부터 7개월
- 소요예산('21년): 340백만원

□ 추진계획

- 자료 검색 기능 강화 및 메뉴 구조(화면 구성) 개선
 - 키워드 검색 및 주제별 통계보고서 검색 기능 개발
 - 이용자 편의를 위한 화면 개선, 전문용어에 대한 메뉴별 상세 도움말 제공
- 시계열 데이터 관리 기능 개발
 - 특정 시점별, 기간별 비교하는 통계·분석 기능 제공
- 공간정보 기반으로 건축주택 관련 데이터 분석 가능한 **시범 사이트 구축**

□ 향후일정

- 1단계 구축 용역 사업자 선정 및 사업 추진 : '21. 4.~12.

5 불법건축물 예방을 위한 관리 및 홍보 강화

<건축기획과>

올바른 건축문화 정착과 공정한 건축 질서를 확립하고자 시민들에게 불법건축물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자 함

□ 사업개요

- **(불법건축물 관리)** 주요 위반유형별 위반건축물 점검
 - 점검대상: 소형, 중·대형 건축물, 공개공지로 구분
 - 점검내용: 불법 방쫓개기, 무단증축, 무단용도변경, 공개공지 사유화 등
 - 행정조치: 영리목적 및 상습위반 시 이행강제금 2배 가중 부과 등
- **(홍보 강화)** 불법 건축물 사전예방을 위한 대시민 홍보

□ 추진현황

- **위반건축물 조사·정비 계획** 자치구 시달 및 **건축행정시스템 개선** 추진 등
 - 분기·반기별 단속 추진 및 세움터 개선을 위한 국토부와 지속 협업
- **건축법령 이해를 위한 책자 제작 및 전자책 배포**(서울시 전자책 서비스)
 -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('20.12.), 2021 건축법령집('21.1.)
- **불법건축물 예방을 위한 대시민 홍보 강화 유튜브 강좌 등재**
 - '좋은 건축주 되기-건축법령' 등 교육지원 및 24회 강좌 등재('20.11~)

□ 추진계획

- **주요 위반사항 중점점검 및 단속 강화**(분기별 자치구 교차점검 실시)
 - 근린생활시설 무단 용도변경, 불법 방쫓개기, 발코니 위반사항 등 중점점검
- **건축 관련협회와 공유 및 협업으로 시민홍보 창구확대**('21.4.)
 - 건축법령 자료 및 홍보자료를 공유·배포하여 불법건축물 발생 예방
- **중소규모 건축물 위반건축 방지방안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추진**('21.4.)
 - 건축사장계위원회 징계를 분석하여 위법방지 방안 마련

□ 향후일정

- 불법건축 관리 강화를 위한 세움터 개선방안 지속발굴 : ~'21.12.

6 위험건축물(D·E급) 안전관리 계획

〈 지역건축안전센터 〉

위험건축물 대상 '안전점검 지원, 위험시설 정비, 관리제도 개선' 등 3대 분야, 8개 추진과제를 수립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 실시로 안전사고 예방

□ 안전관리 계획: 3대 분야, 8개 추진과제

- 위험건축물 관리 현황('21년): 125개동(D급 99동, E급 26동)
- 세부 추진과제

1. 안전점검 지원

- ① 정밀안전진단 지원 사업으로 보수·보강 등 기술지원
- ② 정밀안전점검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, 위험건축물 관리 강화
 - 정기안전점검 연 3회(기준) + 정밀안전점검 2년 마다 추가 실시(개선)
- ③ 취약시기(해빙기, 우기, 태풍, 명절, 동절기) 대비 안전점검 실시

2. 위험시설 정비

- ④ 인명사고 위험 구조물 및 가시설 정비를 위한 조치강화 및 지원
 - (정비절차) 안전조치 명령 ⇒ 미이행 과태료 부과 ⇒ 행정대집행
- ⑤ 위험건축물 실태점검 연 2회 추진 및 부실 안전관리 단속 강화
 - 연 2회(상·하반기) 실태점검 ⇒ 안전조치 명령 ⇒ 과태료 부과

3. 관리제도 개선

- ⑥ 3종시설물 관련 도서작성, 정기안전점검 실시 등 행정지원
 - 소규모 공동주택 등의 설계도서 작성, 유지관리계획 수립, 정기안전점검 등
- ⑦ 정비구역 위험건축물 정비를 위한 간담회 및 공정관리
 - 이주대책, 위험요소 해소 방안, 정비사업 추진 등 논의(분기별)
- ⑧ 법령 개정 추진
 - D, E급 위험건축물은 매 2년 정밀안전점검 의무화(시설물안전법)
 - 정기안전점검 결과 보고서에 대한 부실 평가 도입(시설물안전법)

□ 향후일정

-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 사업 추진 : '21. 4.~ 12.
- 안전관리 실태점검 실시 : 상반기(5월), 하반기(11월)

7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구성 · 운영

<공동주택과>

공동주택 하자 등과 관련된 시공 품질문제를 입주 전 선제적으로 해결하여 입주 후 발생할 갈등을 예방하고, 주거만족도 향상 기여

□ 추진배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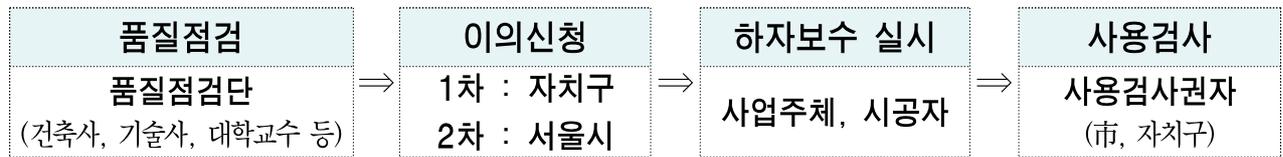
- 공동주택 하자관련 분쟁이 빈발하여 시공품질 향상에 대한 입주예정자의 요청에 따라 전문적으로 공사품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품질점검단 구성·운영
 - ※ 국토교통부 하자심사·분쟁조정위원회에 최근 6년간 23,000여건 공동주택 관련 조정 요청 접수

□ 추진계획

- 점검대상: 민간사업주체가 건설하는 **150세대** 이상의 공동주택
- 세부계획

구 분	운영방식	점검시기	점검방법
서울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운영총괄 - 점검매뉴얼 수립 - 결과관리 - 市점검단 구성·운영 (50명 내외, 분쟁조정 및 市사업 점검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1차점검 : 골조공사 후 (입주예정자 1/10 이상 요구시) ◦ 2차점검 : 사용검사 전 (의무사항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주택법령 및 설계도서 등을 통한 전문가 집단의 시공 품질 점검 - 공용부분 - 3세대 전유부분 - 사전방문 이외신청사항
자치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점검집행 - 區 점검단 구성·운영 (100명 이내, 區사업 점검) 		

○ 품질점검 및 하자보수 절차



○ 소요예산: 약 3억 6천만원

※ '21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 반영

□ 향후 일정

- 시·구 품질점검단 구성 및 매뉴얼 마련 : '21. 4. ~ 7.
-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: '21. 7.~

8 공공재개발사업 추진현황

<주거정비과>

지난 1월, 3월 선정된 공공재개발 24곳 후보지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 시범사업 본격 추진을 통한 양질의 주택공급 기반 강화

□ 사업개요

- (개 념) 장기 정체구역, 신규구역(해제지역 포함)에 공공(LH·SH 등)이 참여, 공공성 강화 및 인센티브 등 사업을 촉진시켜 주택공급 기반 강화

√ 공공성 요건 : 조합원 분양분 제외한 주택 50%이상 임대공급(공공임대, 수익형전세, 지분형)
√ 인센티브 : 서울시, 정부는 도시규제 완화, 사업성 보장, 신속한 인허가, 사업비 지원

- (지원내용) 도시규제 완화, 사업성 보장, 사업비 지원, 신속한 인허가 등

□ 추진현황

- (시범사업 후보지 선정) 24개소 2.4만호

- 기존구역: 흑석2구역 등 8개소 4.7천호('21.1)

- 신규구역: 상계3구역(가칭) 등 16개소 2만호('21.3)

▶보 류(8곳) : 사업방식에 대한 주민이견, 사업성 개선 한계로 실현가능성 부족 등

▶미선정(4곳) : 도시계획적 관리 필요, 주민 반대 여론이 높은 지역 등

- (투기방지)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+ 분양 받을 권리산정기준일 고시

- (사업지원) 갈등 조정 등 위해 전담 코디네이터 파견(구역별 2명)

- (법령개정) 도시정비법 개정 공포(4.13) ※ 7.14 시행

□ 향후계획

- 주민설명회, 사업시행자 지정 등 시범사업 본격 추진 : '21. 4.~12.

- 주민설명회(4월~) → 공공시행자 지정(5월~) → 정비계획 수립(6월~)

▶신규구역은 5월부터 주민설명회 시작, 이르면 연말부터 정비계획수립 착수 예정

-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등 제도적 기반 조성 : '21. 7.~12.

9 재개발재건축 미해산 조합 일제조사 및 관리방안 마련

〈 주거정비과 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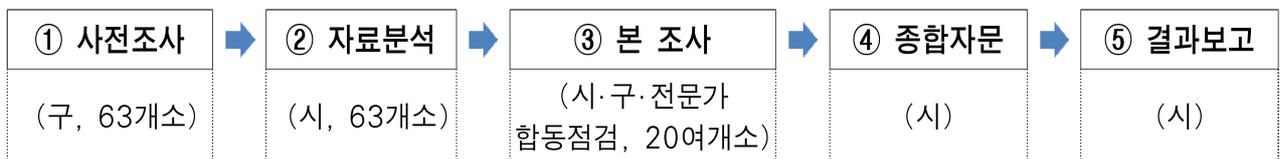
장기간 해산 지연으로 인해 주민갈등, 조합원 피해 등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미해산 조합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 관리방안 마련

□ 사업개요

- 조사대상: 21개구 63개소(준공 후 1년 이상)

구분(개소)	대상조합	해산진행 중	소송 중	추진주체 부재	기타 (조합장 공석 및 해임 등)
총 계	63	21	20	17	5

- 점검방법: 2개 점검반 편성(반별 6명: 시 2, 구 2, 전문가 2)



- 주요 점검내용

- 잔여자금 현황 등 사용내역 적정성 및 소송 현황 등

□ 추진현황

- 도시정비법 개정 건의('19. 2.~'20. 5.)
 - 조합해산 법제화 및 해산지연에 따른 벌칙조항 신설 등
- 미해산 조합관리 근거 마련을 위한 도시정비조례 개정('19. 9.)
 - 준공 후 1년 이상 미해산 조합 대상, 조합해산 계획 등 제출 의무화
- 미해산 조합 관리실태 일제조사 착수('21. 3.~)
 - 자치구 사전조사 완료: 103개소 (미청산 조합 40개소 포함)

□ 향후계획

- 본조사(시·구·전문가 합동점검) : '21. 4.~ 5.
- 점검결과 정리 및 개선방안 마련 : '21. 6.

10 정비(예정)구역 해제지역 실태조사 및 분석 추진

〈 주거정비과 〉

해제된 정비구역(388개소) 중심으로 건축행위·기반시설 등 실태조사 및 분석을 통해 정비와 보존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관리방안 마련

□ 사업개요

- 용역명: 정비(예정)구역 해제지역 실태조사 및 분석 용역
- 용역업체: (주)동해(도시계획), (주)지아이(건축), 성균관대(학술)
- 계약기간: '20. 8. 4. ~ '22. 2.12.(18개월)
- 소요예산('21년): 467백만원

〈 정비(예정)구역 해제지역 현황 및 문제점 〉

- 대상지역: 해제구역 전체 388개소(재개발 181, 재건축 207)
- 문제점: 해제지역 주택 및 기반시설 노후화 가속 및 내부 주거지 슬럼화·지역침체 심화 우려

□ 추진현황

- 해제지역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
 - 해제지역 388개소(일반해제 302, 직원해제 86) 대상 조사·분석
 - 주민의견 및 해제사유 심층 분석, 해제 이후 신축 등 주거환경 개선여부 실태과약
- 해제지역 특성별 유형화(안) 및 맞춤형 관리방안(안) 제시
 - 정비와 주거의 질 향상에 초점, 정비요건, SOC취약도, 사업가능성 등
- 지속가능한 장·단기 맞춤형 해제지역 관리방안(안) 모색
 - 지역여건에 따라 관리형, 재생형, 정비형, 혼합형으로 분류

□ 향후계획

- 해제지역 주민 설문조사 및 실태조사 보완 : '21. 4. ~6.
- 해제지역 특성별 유형화 및 맞춤형 관리방안 마련 : '21. 4.~12.